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2017. 3.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2017.3

미래창조과학부 · K I S T E P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은 제재조치 과정에서 참고 가능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제재조치 대상·방식·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 부처별 근거 법률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jaehoonlee@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나래 연구원(nraelee0@kistep.re.kr)



제1장 제재조치 개요	1
제1절 법적 근거	1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내지 제27조의5	2
3. 부처별 세부규정	4
제2절 연혁	6
제3절 주요 용어	7
1. 국가연구개발사업	7
2. 참여제한	7
3. 회수	7
4. 사업비 환수	10
5. 제재부가금	10
6. 연구부정행위	10
제4절 해외 동향	11
1. 미국	11
2. 일본	13
제2장 제재조치	14
제1절 제재조치 주체	14
제2절 제재조치 대상	15
1. 범위	15
2. 선택 기준	16
3. 승계 여부	17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18
1. 제재조치 평가단 역할	18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18
제4절 제재조치 절차	20
1. 절차 개요	20
2.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20
3. 이의신청	21
4. 제재조치 통보	23
제5절 참여제한 절차	26
1. 참여제한 기산점	26
2. 참여제한 통보 및 등록	27
3. 과제참여 가능 시점	27
제6절 사업비 환수 절차	29
1. 환수금 납입	29
2.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29
3. 환수 기한	29
4. 납부 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30
5.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31
6. 국세 체납처분 절차	31
7.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43
8. 환수 대상자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44
9. 징수절차를 중단한 기간 동안의 환수금 채권 관리 여부 및 방법	45
10. 소멸시효	45
제7절 제재부가금 절차	46
1. 납부 기한	46
2. 수납 후 처리	46
3.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46
4. 소멸시효	46

제3장 제재조치 내용	47
제1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47
1. 산정 기준	47
2. 감경/감면 및 면제	53
제2절 제재부가금	54
1. 산정 기준	54
2. 가중	54
3. 감경	55
제4장 질의응답(Q&A)	56

□ 참 고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69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제7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 중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 75

□ 별 첨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제재정보 입력 매뉴얼 81

제1장 제재조치 개요

제1절 법적 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하면 5년(동일 참여제한 사유 최대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제1항)
- ▶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7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4, 제27조의5

- ▶ (제27조)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감액 등에 관한 기준
- ▶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기준
- ▶ (제27조의3)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 ▶ (제27조의4)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 (제27조의5)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절차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

3. 부처별 세부규정

▶ 각 부처별 세부규정은 상위 근거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함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부 처	세 부 규 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상위 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상위 근거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제2절 연혁

▶ '01. 12월 국가R&D사업 제재 근거 마련

- 참여제한 최대 2년 → '05. 3월 최대 3년 → '08. 5월 최대 5년으로 확대(공동관리규정 제20조)

▶ '05. 3월 참여제한 정보 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 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10. 2월 사업비 환수 제도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참여제한 내용 포함)

▶ '14. 5월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 대상 확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외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기업 →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 추가

▶ '14. 12월 환수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및 환수금 처분 승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양도, 합병 시 양수자 또는 합병 기업에게 미납 환수금 처분 승계

▶ '15. 6월 환수금 미납 시 제재근거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5. 12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기간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6. 7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처분 세부 기준 마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3절 주요 용어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양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2. 참여제한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 사용 등 제재조치 사유 행위를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3. 회수

- 중양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 연구개발비에서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액이 있거나,
 -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부당집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 제4항)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양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양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양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양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생략)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생략)

▶ 부당집행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에 명시

- ※ 일부 부처는 부적정집행금액이라고 명명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참고(참고1)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을 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을 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을 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4. 사업비 환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재조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에 의한 사업비 환수는 제재조치에 해당함

5. 제재부가금

-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 환수와는 별개의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6. 연구부정행위(공동관리규정 제30조)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 위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절 해외 동향

1. 미국

가. 참여제한

- ▶ 정부R&D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조금 및 용역(Grants and Agreements) 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운영
- ▶ 정부R&D의 경우 연방정부규정집*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비-조달형 계약(non-procurement transaction)으로 구분

* 연방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제정된 연방행정법규 및 규칙은 미국 연방 전체에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 계약자가 조사 또는 법적인 절차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suspension)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debarment)할 수 있음 (2 CFR part 180)

※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 용도외 사용(false claim) 포함됨

- ▶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美 법무부 감찰국(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또는 美 사법부(DOJ;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참여제한이 되는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등 결정

※ 참여제한 기간은 통상 수년으로 결정되나 영구적인 참여제한도 가능

미국의 주요 참여제한 사유

- (a) 다음의 사유로 형사 상 유죄판결(conviction) 또는 민사 판결(civil judgement)을 받은 경우
 - (1) 공공 · 민간 계약 · 거래계약의 체결 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사기(fraud) 및 범죄행위(criminal offense)
 - (2)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정하는 반독점규정의 위반
 - (3) 횡령(embezzlement), 절도(theft), 위조(forgery), 뇌물(bribery), 변조(falsification), 기록삭제(destruction of data), 입출금내역 허위생성(making false statements), 조세포탈(tax evasion), 장물취득(receiving stolen property), 허위청구(making false claims), 재판방해(obstruction of justice)
 - (4) 기타 진실성 또는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행위
- (b)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 및 거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의 무결성에 큰 손상을 준 경우
 - (1) 하나 이상의 공공계약 · 거래의 계약조항을 이용해 고의로 실패한 경우
 - (2) 하나 이상의 공공계약 · 거래에서 실패하였거나 낮은 성과를 낸 경우



(3) 공공계약·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구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이 하 생 략 -

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 ▶ 美 연방정부계약에서의 ‘허위청구(False claim)’가 우리나라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인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유사한 개념으로,
- ▶ 허위청구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 등과 별개로 Contract Dispute Act (41 USC 7103)에 따라 허위청구금 상당액을 배상하고, False Claim Act (31 USC 3729)에 따라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하며, Forfeiture (28 USC 2514)에 따라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됨

*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형벌의 일종이 아닌 금전벌

** 해당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시켜 부당이득 혹은 기존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등을 불허

▶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 ① 계약자가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실의 잘못된 제시(mis-presentation of fact)나 사기(fraud)에서 비롯된 경우 연방정부에 청구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역으로 美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② 계약자가 알면서(knowingly) 허위청구를 하거나 청구에 필요한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美 정부 손해액 3배(일부 조건 충족 시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됨
 - ※ 각 연방기관에 설치된 감찰관실(OIG)의 조사에서 허위청구가 발견되는 경우 통상 사법부(DOJ)로 이관되고 DOJ가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 DOJ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15만 달러 이하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이 환수하는 것이 가능 (34 CFR Part 33)
 - ※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은 1863년 링컨 대통령 시기에 제정되어 일명 ‘링컨법’으로 불리는데, 내부고발자 등 개인 및 美 연방정부 모두가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③ 계약자가 美 연방정부에 대해 증거, 진술 등에 있어서 부정하게(corruptly) 기망(fraud)을 행하거나 행하려고 한 경우 그 사람의 청구권은 상실됨

2. 일본

가. 참여제한

- ▶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취급규정(科學究費補助金取扱規程)”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학연구비보조금사업의 참여를 제한 (기금 등의 다른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① 과학연구비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10년
- ② 전호의 관련자와 과학연구비보조금 부정사용을 공모한 사람 : 전호의 기간과 동일
- ③ 과학연구비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하지 못한 보조사업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2년
- ④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에 공모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5년
- ⑤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람(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 논문 등에 대한 책임자를 포함)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10년

※ 일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날조, 변조, 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과학연구비보조금사업 운영방침)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

나. 사업비 환수

- ▶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사용에 대해 연구기관의 사무(科學研究費補助金の使用について各研究機関が行うべき事務等)”에 따라,
- ▶ 연구기관은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비에 대한 관리 및 연구비 사용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적정집행을 위한 사무체제 정비 및 검수 등을 담당하는데,
- ▶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혐의가 있고 연구기관이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부적정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부과학대신에게 반환



제2장 제재조치

제1절 제재조치의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처분·통보·관리 권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음*

- 단, 제재조치 업무 중 하나인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8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제재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2절 제재조치 대상

1. 범위

- ▶ 제재조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임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제재조치 가능
 - 단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는 ‘출연하거나 보조한’ 기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그 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할 수 없음

※ 각 기관기업에 대한 정의(공동관리규정 제2조)

기관	정의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2. 선택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선택하여 제재조치함

나. 귀책사유 고려 여부

▶ 제재조치 대상자 선택 시 귀책사유를 고려함이 바람직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생략)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제30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생략)

다. 기관·단체·기업/연구책임자·연구원·소속임직원에 따른 제재조치

▶ 공동관리규정상 기관·단체·기업인지 연구책임자·연구원·소속 임직원인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달리하는 기준은 없으며, 제재조치 평가단이 구체적인 사유 및 귀책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대상, 환수여부 등 제재조치 내용을 정함

※ 단, 일부 기관의 경우 참여기업, 연구자, 연구기관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을 세분화시킴(참고2)

- ▶ 기관·단체·기업의 경우, 규모·구성형태 또는 유형(사단법인/재단법인,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달리하지 않으며, 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단위*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기준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관리지침에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 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까지 통합하여 법인을 상대로 참여제한을 부과하는 경우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승계 여부

가. 근거 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나. 승계 대상 : 사업비 환수 대상이 기관, 단체, 기업인 경우에 한정

-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 규정이 없음

다. 제재조치 효력의 승계 :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후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 환수처분의 효력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됨

- * 법인합병 내역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음

라. 제재사유 승계 :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 ▶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존재함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1. 제재조치 평가단의 역할

-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제재조치 평가단은 제재 사유 발생 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 환수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등을 심의함

※ 부처에 별도의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내용에 따라 심의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단, 공동관리규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운영이 권장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및 제27조의4 제2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생략)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제재조치 세부기준별로 제재조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처분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중소기업청은 평가위원회, 농촌진흥청은 제재심의위원회 등으로 명명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 ▶ 공동관리규정에서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및 제27조의4 제2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⑥ (생략)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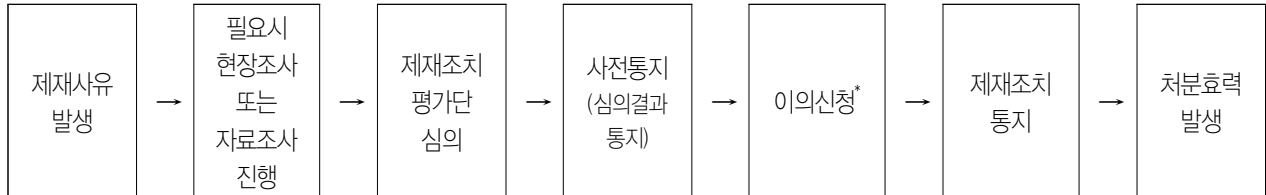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각 부처에서 구성 인원, 운영 방식 등을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정하여 구성·운영하며, 상기 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할 수 있음



제4절 제재조치 절차

1. 절차 개요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¹⁾

2.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 ▶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사전통지 없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 사전통지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참고: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단계가 제재조치 절차의 ‘이의신청’ 단계에 해당함



- 사전통지는 처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전통지는 확정 처분 전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통상의 평가결과 통보와 달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해서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제한 처분 대상자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3. 이의신청*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

가. 근거규정

- 공동관리규정은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어긋나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 기한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의신청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것을 권장함

다.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제재 내용을 재검토한 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처리 방식 등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 일반적으로 제재조치 평가단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심의하고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② 제재조치 후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동법 동조 제6항) 해당 서류·물건을 보관하여야 함

4. 제재조치 통보

가. 문서에 의한 통보

-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 따라서 문서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함이 바람직함
-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나. 통보 대상자

- ▶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 예를 들어 총괄책임자에게 참여제한 3년을, 주관연구기관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통보와 별도로 총괄책임자 개인에 대한 문서 통보를 하여야 함

다. 문서 송달 방식

- ▶ 문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 ▶ 교부 송달
 - 송달 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에*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협약 내용 예시

- ① 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기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다음 각 호 주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발송
 -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등록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 전자우편주소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함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미확인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SMS(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문 확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한 우편송달을 함께 하는 것을 권고함

▶ 공시송달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송달의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은 이와 같은 송달 효력 발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제5절 참여제한 절차

1. 참여제한 기산점

-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처분의 효력 발생하므로, 처분 효력 발생 시점 이후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해야 함
- ▶ 또한 이미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다면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의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해야 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4의2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적용기준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복수의 제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하나의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합산하되, 과거에 동일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산 가능
- 둘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개시, 진행되도록 함
- 이미 다른 과제에서 받은 참여제한 기간 진행 중에 새로운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되도록 함
- 여러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를 동시에 심의하든 별도로 심의하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여러 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할 경우,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각각 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을 독립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 여러 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각 과제별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및 처분통지는 각 과제별로 하고, 이의신청 시 이의제기된 과제들을 모두 다루도록 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전문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한 경우 전문위원회 별로 독립적으로 참여제한을 기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2. 참여제한 통보 및 등록

- ▶ 참여제한 처분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함
- ▶ 참여처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참여제한 시작일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 참여처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재처분에 관한 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정보를 등록한 관련 기관(전문기관 등)은 등록한 정보의 누락과 오류 여부 등을 NTIS의 검증기능을 통해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수정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3. 과제참여 가능 시점

- ▶ 과제 참여자 선정 시 참여제한 여부 확인 시점은 신청 마감일 기준이므로, 과제 신청 마감일에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4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6절 사업비 환수 절차

1. 환수금 납입

-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

- 환수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환수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 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 법령이나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금 환수 원칙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청은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을 환수 가능함을 규정하고, 관리지침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2), 3), 5)

- 2) 정부출연금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5) 전문기관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3. 환수 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4. 납부 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 ▶ 공동관리규정은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 납부 대상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부 연장을 요청하면 연장사유를 판단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고시 또는 관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6)

6)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2]. ⑥ 중 일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부 연장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열위’ 또는 ‘불량’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부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 경우 : 열위
-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 경우 : 불량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22. 라. 6)

6)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환수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9조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

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 ▶ 제재대상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때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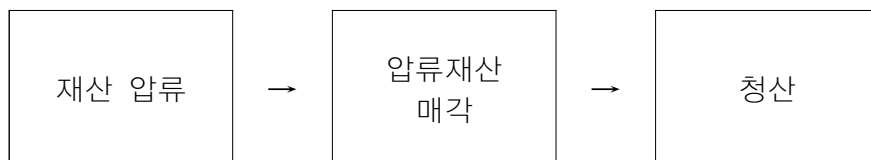
※ 독촉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② 환수 결정 일자 ③ 환수 이유 ④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⑤ 납부장소 ⑥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는 내용

- ▶ 독촉장의 납부기한 후에도 미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국세 체납처분 절차*



* 체납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반환금 등 체납처분 업무 매뉴얼」(2010. 11.) 제3장 ‘체납처분’ 부터 참고(참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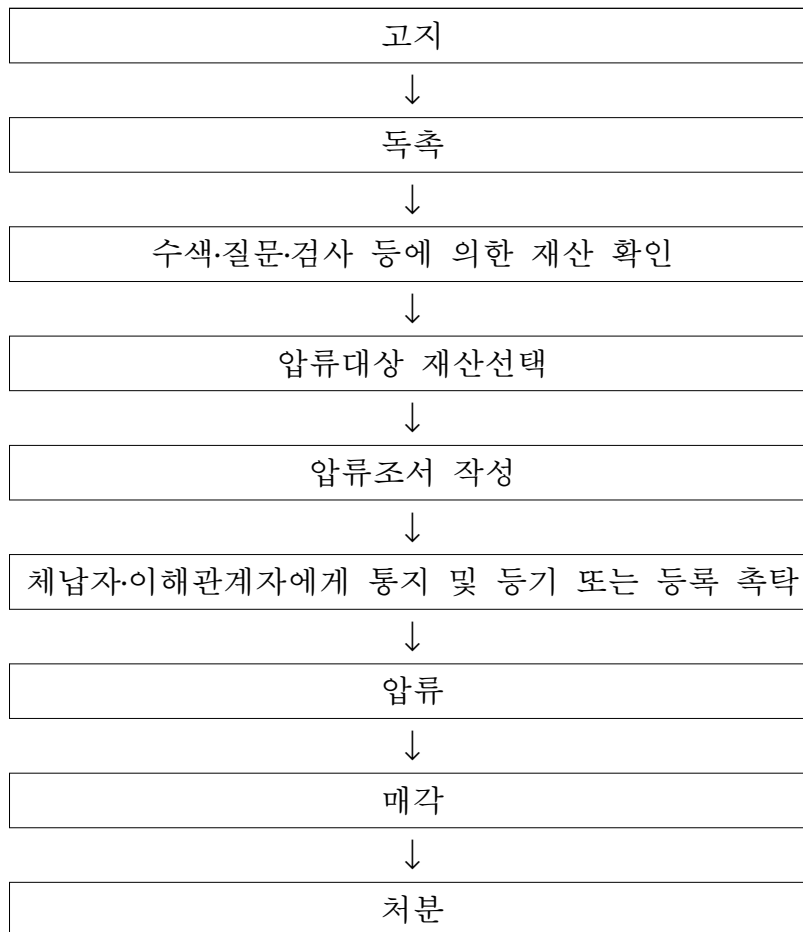


가. 재산 압류

- ▶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한 후, 독촉장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장 제2절 제93조 참고

▶ 압류절차



▶ 재산 확인

- 징수담당직원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있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음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채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하고,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함

*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8조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질문·검사 :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조사로서, 징수담당직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 등 관계인에게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어서 알고자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질문·검사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행해야 하며, 검사 시 물건을 점하거나 변형, 소모 등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제27조

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수색 : 징수담당직원이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공권력에 근거한 강제처분임

*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양도 등) 상기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재산 조사 시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함

* 국세징수법 제30조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필요 시 관계인 이외의 자의 퇴거를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33조

제3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 재산 선택

-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어야 함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거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총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times \frac{1}{2}$

-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세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함(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2항)

▶ 압류조서 작성

- 압류 시에는 반드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시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함
-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함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29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체납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및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압류할 경우, 다음 사람에게 압류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채권 : 해당 채권의 채무자(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해당 채권자(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 가등기재산 : 가등기권리자(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소액보증금 또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 : 해당 채권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 :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 채권 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무체재산권, 매수한 국유·공유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3항,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2항)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할 경우 관계 등기소 또는 관서에 등기 또는 촉탁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압류

- 재산종류별로 압류 효력발생 사유가 다름
 - 동산, 유가증권 : 점유(국세징수법 제38조)
 - 채권 :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국세징수법 제42조)
 - 부동산, 등기된 선박, 등기된 항공기 등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 무체재산권 : 압류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환수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국세징수법 제51조)
- 압류 시 필요한 경우 관계인 이외의 자의 퇴거를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33조

제3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 압류해제

-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 대상 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

제24조(압류) (생략)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나. 압류재산 매각

- ▶ 압류물건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제62조)

* 공매가 원칙임

▶ 공매

-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공매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공매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압류된 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경우 직접 매각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61조 제2항)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음. 다만,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 ▶ 수의계약 :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으로,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62조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듦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함(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 ▶ 매수인은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매각재산이 부동산 기타 등기를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하는 재산으로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이전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들 권리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함

다. 청산

- ▶ 압류금전,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체납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배분하는 과정
- ▶ 배분금전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 배분 절차

- 교부청구 : 압류재산상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교부청구(민사소송법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배분계산서 작성 및 통지 : 채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채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춰야 함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81조, 민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
 - ※ 참고로 환수금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되지 않음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

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체납자들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의 교부 및 이의제기 부분 처리 : 배분한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에 예탁하여 함
 - 채권자가 배분금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배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고(보관금 계정)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7. 체납처분의 중지 · 유예

가. 중지(국세징수법 제85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나.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환수 대상자 부도 · 폐업 · 회생 · 파산 시 처리 방법

- ▶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바 없음
- ▶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회생 ·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환수금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 신고 하여야
 -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자집회 결의-법원 인가’를 통해 확정된 회생계획안에서 조정된 채권액 및 변제기간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
 - 파산채권은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액이 법원의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된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따라서 실제 환수 가능한 채권액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액으로 제한될 것이므로,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환수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 환수대상자의 폐업 · 부도 시
 - 폐업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더라도 환수대상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 영업을 개시하거나 자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환수처분 및 통지, 독촉 등 환수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진행하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단계를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회생 · 파산 · 폐업 · 부도 등에 따른 징수절차 중단, 환수금 면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징수절차 중단 : 영업장 폐쇄 ·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 중단 가능

- 환수금 면제·감면 : 징수절차 중단 기간 경과 후에도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과정을 거쳐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9. 징수절차를 중단한 기간 동안의 환수금 채권 관리 여부 및 방법

- ▶ 징수의 실익이 없어 법적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경우라도, 유예기간 동안 영업 개시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단되었던 법적조치를 개시함
- ▶ 처리절차 예시
 -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폐업 기타 등의 사유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징수 절차를 5년 간 유예한 후 내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
 -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년 간격으로 폐업 여부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함
 - 사업이 재개되고 재산 상태 상 법적 조치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징수절차를 시작함

10.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 환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참고로 상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5년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제7절 제재부가금 절차

1. 납부 기한

- 중양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양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 제2항)

^{*} 사전통지 통보가 아닌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 해석되도록 수정될 필요성 있음

2. 수납 후 처리

-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양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 제3항)

3.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 국세 체납처분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근거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8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⑧ 중양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소멸시효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제3장 제재조치 내용

제1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1. 산정 기준

- ※ 하나의 위반행위가 각 호 내 여러 세부기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중 제재가 가장 강한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정함
- ※ 부처별 근거법률, 운영요령 등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면제	-
다. 실패,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경우 2)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3)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
다.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고,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해외인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5년)	이내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비공개 최종보고서 임의 공개 포함)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포기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1)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기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연구기관으로 연구성과물 및 연구비 잔액을 성실히 이관한 경우	면제	-
나. 총 수행기관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다.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포기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 라.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포기 후 연구기관이 변경되어 연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연구기관으로 연구성과물 또는 연구비 잔액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
가. 미납의 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3)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에 의해 실용화 지연 및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등으로 납부연장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면제	-
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다.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2년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파산의 경우	2년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2년	
3) 폐업, 부도의 경우	2년	
4)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 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
바. 기술료납부계획서 또는 약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사. 해당 기관(기업)이 경상기술료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3년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점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전용금 이내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년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4년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3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5년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4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년	해당 연도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4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면제	-
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既) 개발품 신청, 청탁, 허위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해당 금액
2)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
3)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다.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마.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바.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1년	-
아. 단순 참여기업이 종료된 연차까지 부담하기로 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참여를 포기하여 다음 연차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년	-
자.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2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차. 그 밖에 중요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2년 이내	-

1) 원심 판결

-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인정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인정
 - LED 빛이 소실 없이 프로젝터 투영에 쓰이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 원고들이 전체 1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 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

2) 대법원 판결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인정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불인정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함
 - ① LED 부품이 선정된 후에야 렌즈를 포함한 광학구조의 설계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앞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광학구조의 설계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② 상당한 노력을 들여 도면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광학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실시한 사실, ③ 피고가 사업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 성실성’에 관한 세부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의 미흡을 지적한 것 외에 연구개발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

2. 감경/감면 및 면제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감경·감액 및 면제 사유는 다음 한 가지임

- 결과 불량으로 중단 또는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는데(1호) 성실 수행 인정된 경우

→ 참여제한 단축 또는 면제 / 사업비 환수액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공동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 적발 시 해당 금액이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 1년 이상을 감경한다는 내용은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재량의 과정에서 여러 감경사유 중에 하나의 감경사유로 고려한다고 이해되어야 함

▶ 일부 부처에는 참여제한 사유 소멸 시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6항)
- 보건복지부는 “실용화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실시계약체결 및 체납 기술료를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제10항)

**제2절 제재부가금(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4 제1항, 별표6)****1. 산정 기준**

- ▶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가중

-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경

-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에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질의응답(Q&A)

1.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 ▶ 연구자 개인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상기 연구자는 해당 참여제한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단, 공동관리규정 제3조 각 호 사업은 공동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각 개별사업 규정, 공고 등에 의해 참여 여부가 결정됨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제한을 받은 다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부처가 아닌 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참여제한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상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참여제한 조치를 한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함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가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이직한 후 A기관에서 수행을 마친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A기관 또는 B기관에 대하여 참여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 ▶ 제재조치 대상 가능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므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 따라서 B기관이 상기 연구책임자가 A기관에서 수행한 과제에 참여한 바 없다면 B기관을 참여제한 시킬 수 없음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 상기 과제에 참여하였던 A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함. 제재조치 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재 사유에 대한 A기관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 참여제한 조치는 신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 단, 공동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협약 해약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연구자의 성실 수행여부, 과제 중단에 따른 비용 비교 등을 검토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생략)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한 과제에서 제재 조치를 한 후 또 다른 제재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참여제한이 가능한지?

-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과제에서 최대 10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10년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기존 참여제한 조치 기간을 뺀 기간(10년-기존 참여제한 기간)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 ▶ 예를 들어 A과제에서 2년 참여제한 조치를 한 이후 또 다른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8년 범위에서 추가적인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함

6.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비 환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비 환수 시 반드시 참여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는 사유 및 귀책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조치할 수 있음.

7. 참여제한 조치 후 참여제한 해제가 가능한지?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참여제한 기간 종료 외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외에 별도 근거 상위법이 있는 일부 부처 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특정 사유에 한해 참여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 ⑥ 장관은 제1항제8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제재 등)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8. 연구비 집행 잔액 미납 사유로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집행 잔액(정산금) 미납’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함
- ▶ 일부 부처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산금 미납을 제재조치 사유로 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선정된 후 협약 체결 전에 연구수행을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참여제한이 가능한지?

- ▶ 참여제한은 어려워 보이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7조 제10항의 별표 1의3에 따라 협약 포기 후 3년 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선정된 다음 협약 체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참여제한이 가능함

10.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 ▶ 별도의 법에 의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은 무관함
- ▶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상태가 아니므로, 국가계약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가능함



11.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제재 가능한지?

가. 공동출원인 경우

-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기관 명의뿐만 아니라 자신, 즉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도 출원한 것이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됨
- ▶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제재조치 가능함

나. 제3자 명의로 출원한 경우

- ▶ 명문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음
-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제재조치 가능함

※ (참고) 배임죄 해당 여부

-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함(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 ▶ 직무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됨(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 국가R&D 관련 사례는 아직 없으나, 과학기술기본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그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정하고 있고(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협약에서도 이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승계규정이 있는 종업원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받는다고 보아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해당 연구기관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가져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12. 전문기관(KEIT, KIAT 등)의 제재처분의 성격은?

- 전문기관의 제재처분에 대해 제제처분을 받은 기관이 환수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출연금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의 환수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소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

13. 소속 직원의 착오로 사업비 유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가 가능한지?

- 소속직원의 착오나 실수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어 사업비 환수가 가능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

14. “용도와 사업비 사용 비율산정 기준”에서 모수(분모)가 해당기관의 사업비인지 과제 전체의 사업비인지?

- 비율산정시 해당기관의 사업비가 모수(분모)가 됨



15. 참여기관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만 통보(제재처분 공문 발송)하여 참여기관에게 전달하도록 해도 되는가?

-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참여기관에게 통보해야함(모든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확정통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16. 사업비를 ‘일시전용’(사업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과제이외 타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 회복시킨 경우)한 경우도 사업비 유용에 해당하는지?

- 사업비 유용 또는 횡령에 해당함

17. 연구원 명의의 예금통장, 도장 등(기타 인출에 필요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일체의 유·무형물 포함)을 건네받아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 또는 이체하여 인건비를 연구 관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인건비가 연구원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예금통장이나 도장 등을 일괄 보관·관리하면서 연구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이체한 후 집행한 것은 처음부터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것에 해당함
-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함
- 연구책임자·연구기관은 연구원과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학교 등에서는 교수와 학생도 동일하게 인정),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연구 관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예금통장이나 도장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구원의 사전 동의가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려움

18.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 성실수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 ▶ 사업담당실은 참여제한 사유 1호의 성실, 불성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성실수행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중간 또는 최종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평가와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음
- ▶ 성실수행평가단이나 평가위원회에서 성실로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환수 세부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여 성실로 판단하였는지 특정하여야 함. 해당 사유 없을 경우에는 불성실로 판정함
- ▶ 기본적으로 연구결과의 불량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에 대해 참여제한을 하고, 연구 중단이나 실패가 기관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연구 방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대해서도 참여제한 가능함
- ▶ 환수금은 전체 연구목표 중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산정함. 다만, 기관에 대해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19.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경우 %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가 무엇인지?

- ▶ 관련 규정에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와 별표1의4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에 기업부담금을 합한 금액임을 알 수 있음.
- ▶ 출연금은 명확하게 출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정부출연금에 기업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전체 연구비를 의미함



20.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경우에 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도 참여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 ▶ 직원의 연구비 횡령에 대해서도 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대상이 됨. 단, 직원 단독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을 면할 수 있음

21. 과학기술기본법 부칙<제12673호, 2014.5.28> 제2조, 제3조의 ‘최초 협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에서 정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개정된 규정의 시행 후 신규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 뿐 아니라, 계속과제와 같이 연도별로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제의 연차협약 과제도 포함하는 개념임

[참고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9호)」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table><tr><th>계약 등 지출원인행위</th><th>입고 또는 이행 완료</th><th>사업비 지출</th><th>인정·불인정 여부</th></tr><tr><td rowspan="4">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td rowspan="2">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td>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td>인정</td></tr><tr><td>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td><td>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td></tr><tr><td rowspan="2">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td><td>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td>불인정</td></tr><tr><td>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td><td>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td></tr></table>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시 사업계획서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시제품에 한하여는 예외로 함															

구분	주요내용
	<p>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p> <p>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p> <p>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p> <p>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p> <p>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p> <p>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p> <p>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p> <p>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p> <p>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관련 비용(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p> <p>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p> <p>14.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중단일이 포함된 달은 1개월분 전액을 반납)한 금액</p> <p>15.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p> <p>16.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p> <p>17.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p>
직접비	<p>[인건비]</p> <p>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p>

구분	주요내용
	<p>라.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마.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바.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아.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자.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p> <p>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p> <p>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p> <p>[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원래 계획보다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p> <p>[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2. <u>영리기관이</u>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3. <u>협약시</u>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5.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또는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p>



구분	주요내용
	<p>7.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p> <p>8.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e-Tube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지 않은 경우(외자구매 제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p> <p>9.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현물로 집행한 금액</p> <p>[연구활동비]</p> <p>1. 국외 출장경비</p> <p>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p> <p>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p> <p>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p> <p>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p> <p>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p> <p>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p> <p>나.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p> <p>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p> <p>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p> <p>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p> <p>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p> <p>*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p> <p>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숙기료, 기술도입비 등</p> <p>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숙기료 등 각종 수당</p> <p>(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p>

구분	주요내용
	<p>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p> <p>*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p> <p>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p> <p>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p> <p>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p> <p>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p> <p>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p> <p>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p> <p>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p> <p>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p> <p>[연구과제추진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구분	주요내용
	<p>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p> <p>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p> <p>[연구수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차/단계/최종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7.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이 과제에서 산정한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또는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는 예외로 함. 8.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수당을 협약시 사업계획서 인건비의 1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금액 포함).
간접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관의 경우 제6조3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5.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참고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제7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 중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면제	-
나. 실패,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경우 2)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3)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
4)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경감	
다.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해외인 경우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비공개 최종보고서 임의 공개 포함)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포기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2)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면제	-
나. 총 수행기관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다.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이내
가. 미납의 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3)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에 의해 실용화 지연 및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등으로 납부연장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면제	-
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다.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2년	
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파산의 경우	2년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2년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3) 폐업, 부도의 경우	2년	
4)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
바. 기술료납부계획서 또는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사. 해당 기관(기업)이 경상기술료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3년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년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4년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 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3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5년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 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4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4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면제	-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既)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회생·파산의 경우	1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1년	해당 금액
3) 폐업, 부도의 경우	1년	해당 금액
4)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가)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해당 금액
5)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해당 금액
6)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7)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
다.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마.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바.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1년	-
아. 그 밖에 중요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2년 이내	-

【별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제재정보 입력 매뉴얼

NTIS 제재정보 입력매뉴얼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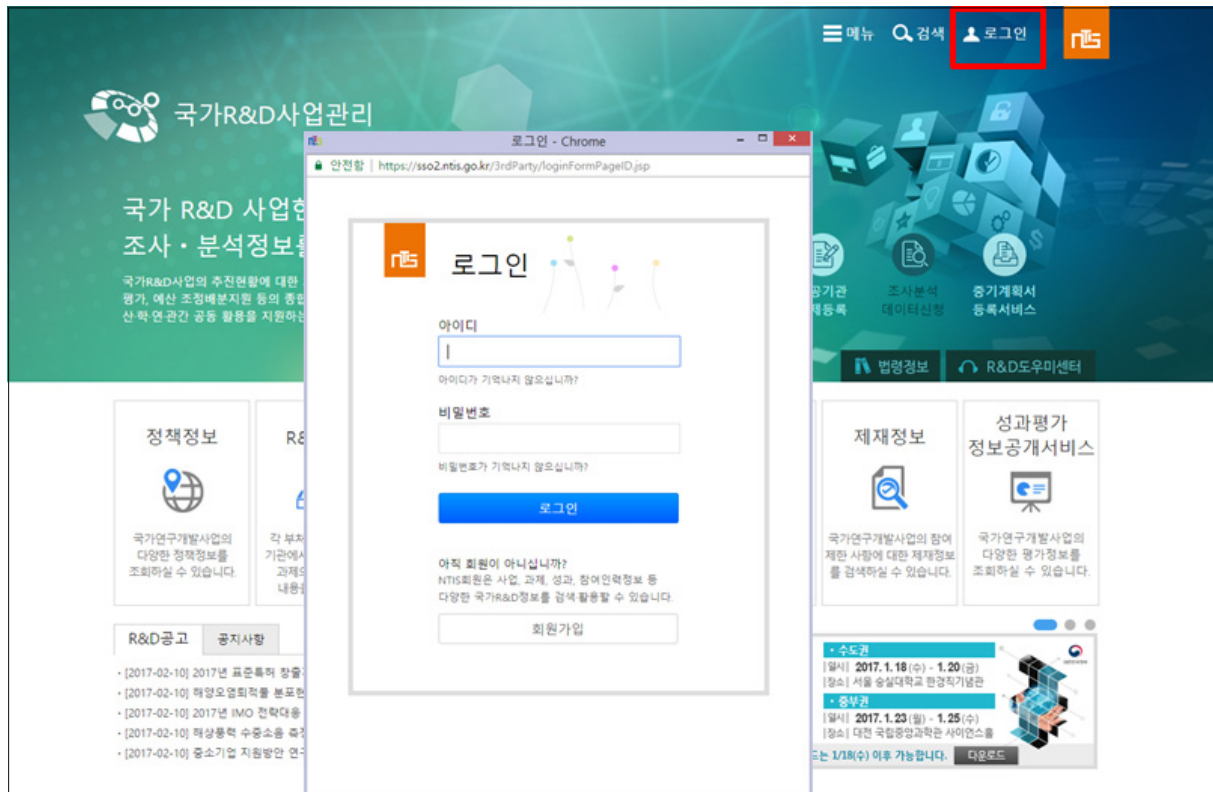
목 차

1. 로그인	87
1.1. 사용자 로그인	87
2. 제재정보 서비스 시작	88
2.1. 제재정보 들어가기	88
2.2. 제재정보 등록 권한 신청	89
2.3. 제재정보 등록	96
2.3.1. 참여제한-단건등록	99
2.3.2. 참여제한-복수등록	104
2.3.3. 환수금-단건등록	105
2.3.4. 환수금-복수등록	108
2.3.5. 제재부가금-단건등록	109
2.3.6. 제재부가금-복수등록	112
2.4. 제재정보 수정	113
2.5. 제재정보 조회	114
별첨 1. 주요 수집항목에 대한 입력양식 및 항목 설명	115
별첨 2. 제재정보 등록 절차	127

1. 로그인

1.1. 사용자 로그인

NTIS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2. 제재정보 서비스 시작

2.1. 제재정보 들어가기

로그인 후,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의 [제재정보]를 클릭합니다.

국가R&D사업관리

국가 R&D 사업현황과 조사·분석정보를 한눈에!

국가R&D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평가, 예산 조정·배분지원 등의 종합조정 업무에 활용하고 관련 R&D정보의 산·학·연·관·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연계신청 공공기관 과제등록 조사분석 데이터신청 중기계획서 등록서비스

법령정보 R&D도움센터

정책정보 R&D공고 R&D사업/과제 조사분석통계 유사과제 **제재정보**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처 혹은 과제관리 기관에서 수행되는 사업, 과제의 세부계획 및 내용을 제공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세 통계분석 및 사업군, 과제군분석의 주요조사 분석결과를 제공합니다.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금액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사항에 대한 제재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평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R&D공고 공지사항

- [2017-02-10] 2017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대상과제 모집 재공고
- [2017-02-10] 혁명오염퇴적물 분포현황 조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 [2017-02-10] 2017년 IMO 선박대응 연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 [2017-02-10] 해상풍력 수중소음 측정기술 개발 입찰 변경 공고
- [2017-02-10]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사업(융합허가용의 신청 관련) 대상사업장 모집...

2017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 자료 다운로드: 1/1(회수) 이후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2.2. 제재정보 등록 권한 신청

제재정보 등록 권한이 없을 경우, **[권한신청]**을 클릭하여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제재정보 조회하기

MY 제재정보 확인

· 성명 : 변지연

· 아이디 : [mask]

· 생년월일 : [mask]

· 소속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

MY 제재정보

상세보기

0건

과거제재정보이력

상세보기

0건

MY 소속기관 제재 확인

바로가기 (CLICK)

제재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국가R&D 제재조치 관련 업무 담당자에 한해** NTIS 내 범부처 제재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일 경우, 사용권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제재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무 수행자가 변경될 경우 바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신청

[제재등록 권한 신청]

제재정보 등록 및 조회를 위한 권한 신청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수신의 공문을 작성합니다.

<제재정보 서비스 권한 신청 공문 예시>

(기 관 명)

수신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연구제도혁신과장)

(경유)

제목 국가R&D 사업관리를 위한 제재정보 서비스 사용권한 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연구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9조(평가위원회 등), 제29조(수행기관 선정 등)
3. 상기와 관련하여 국가R&D 사업 및 과제관리를 위해 제재정보 서비스 사용권한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재정보 서비스 권한 요청 사유 : 진행중인 국가R&D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시 기업(기관) 및 연구인력에 대한 제재여부를 조회하고자 함.

나. 제재정보 서비스 권한 신청자 정보

No.	소속	이름	직위	NTIS ID	비고
01	연구관리팀	홍길동	책임	abc111	
02	연구관리팀	김철수	선임	abc222	
03	연구관리팀	임격정	연구원	abc333	

연구원

팀장

단장

협조자

시행

()

※ 유의사항

- EBBE TET TITTEL —


제재조회 권한관리

신청안내

1. 소속기관은 공문에 명
2. 담당업무는 제재조회권
3. 공문은 기관의 성격과
4. 공문수신자는 미래창조

▶ 2016 제재조회 권한 신

제재권한신청안내 - Internet Explorer



제재정보 조회 권한 신청서

미래창조과학부 수순의 공문을 작성하되 전자문서 발송절차는 NTIS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전자문서 발송 불필요)**

상세 신청 절차는 「국가R&D사업관리 서비스제재정보 조회 권한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다운로드

권한신청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								
성명	변자								
소속기관	국립								
E-mail	ntis								
소속유형	과제								
담당업무 (권한신청사유)	예								
공문업로드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첨부파일추가</div>								

서비스 정책 확인하기

* 권한신청 정보는 NTIS 회원 가입시 입력하신 정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MY NTIS**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권한신청

- ② 여러 사용자의 권한 신청정보를 1개의 공문 내에 표기는 가능하나, 실제 권한 신청은 반드시 각각의 사용자별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해야함(공문으로 일괄 신청되지 않음)

(여시)

(기 관 명)

수신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연구제도혁신과장)**
(경유)
제 목 **국가R&D 사업관리를 위한 제재정보 서비스 사용권한 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우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연구개발사업 공동운영요령 제9조(평가위원회 등), 제29조(수행기관 선정 등)
3. 상가와 관련하여 국가R&D 사업 및 과제관리를 위해 제재정보 서비스 사용권한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재정보 서비스 권한 요청 사유 : 진행중인 국가R&D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시 기업(기관) 및 연구인력에 대한 제재여부를 조회하고자 함.
나. 제재정보 서비스 권한 신청자 정보

No.	소속	이름	직책	NTIS ID	비고
01	연구관리팀	홍길동	책임	abc111	
02	연구관리팀	김철수	선임	abc222	
03	연구관리팀	임꺽정	연구팀	abc333	

연구팀
일장
인장

참조자

시행
()

⇒ 공문 예시와 같이, 동일 기관 소속의 홍길동, 김철수, 임각정의 권한을 1개 공문으로 요청은 가능하나,

이후 홍길동, 김철수, 임객정 3명이 각각 NTIS에 로그인하여 권한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함.

제재정보 등록 및 조회를 위한 권한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재조회 권한관리

신청안내

1. 소속기관은 공문에 명시된 기관명과 동일하게 기관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2. 담당업무는 제재조회권한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3. 공문은 기관의 성격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문을 첨부해 주세요.
4. 공문수신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로 하여 주십시오.

▶ 2016 제재조회 권한 신청 매뉴얼.pdf

권한신청 서비스 정책 확인하기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신규추가 <input type="radio"/> 업무담당자변경	
성명 변지연	NTIS_ID *****
소속기관 한국연구재단	소속부서 연구관리부
E-mail ntis@ntis.go.kr	연락처 042-869-0000
소속유형 과제관리기관	
담당업무 (권한신청사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예시) 교육부 XXX 사업에 대한 연구관리 업무 담당으로서, 신규과제참여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정보 조회 필요</div>
공문업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첨부파일추가"/>

* 권한신청 정보는 NTIS 회원 가입시 입력하신 정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MY NTIS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이메일\]](#)

권한신청

입력항목		설명	비고
신청구분	신규추가	조회권한을 최초로 신규 신청	
	업무담당자 변경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용자 권한 승계	전임자 NTIS ID 필수입력
소속기관 및 소속부서		현 소속된 기관명과 소속 부서명을 정식명칭으로 기입	
E-mail 및 연락처		서비스 정책 및 이용사항 변경 등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시, 연락 가능한 메일 주소 및 연락처 기입	
소속기관 유형		기관별 수행업무 및 성격에 따른 분류 유형	
담당업무		제재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유 기입	관리 사업명, 업무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공문업로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의 권한요청 공문 파일	

※ 소속기관 유형 분류 및 권한범위

소속기관 유형	수행업무	권한범위
연구자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	국가R&D과제를 수행·관리하는 기관의 연구자 또는 관리자 (대학 산단, 연구기관 운영관리부서 등)	소속기관*
연구자(기업)	국가R&D과제를 수행·관리하는 기업의 연구자 또는 관리자	
과제관리기관	국가R&D사업의 선정·평가·사후조치 등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과제관리 전문기관 등)	전체
부처·청	국가R&D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	

* 연구자(출연연, 연구소 등)가 전체 권한을 신청할 경우, 국가R&D사업·과제의 선정·수행·평가·사후조치 등 참여제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 위탁규정 등을 첨부

[제재등록 권한 신청 처리상태 확인]

권한 신청이 정상 완료되면, **[권한신청]** 클릭시 처리상태 및 관련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 권한관리

현재 권한 신청 중입니다.

아래의 신청정보를 **관리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정보

신청구분	신규추가	전임자 NTIS ID	
성명	변지연	NTIS_ID	
소속기관	한국연구재단	소속부서	연구관리부
소속유형	과제관리기관	연락처	042-869-0000
담당업무 (권한신청사유)	연구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제재정보 조회 필요		
첨부파일	국가R&D제재정보 조회 권한 신청.hwp		

< 권한 신청 처리상태 확인(신청중) >

제재조치 권한관리

사용 권한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아래의 반려사유를 **확인 후 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정보

신청구분	신규추가	전임자 NTIS ID	
성명	변지연	NTIS_ID	
소속기관	한국연구재단	소속부서	연구관리부
소속유형	과제관리기관	연락처	042-869-0000
담당업무 (권한신청사유)	연구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제재정보 조회 필요		
첨부파일	국가R&D제재정보 조회 권한 신청.hwp		
반려사유	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어 반려합니다. 보완하여 재신청 바랍니다.		

< 권한 신청 처리상태 확인(반려 및 사유 확인) >

제재조회 권한관리

신청

승인

반려

회수

신청정보

신청구분	신규추가	전임자 NTIS ID	
성명	변지연	NTIS_ID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width: 100px; height: 15px;"></div>
소속기관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부서	연구관리부
E-mail	ntis@ntis.go.kr	연락처	042-869-0000
소속유형	연구자(대학, 출연연)		
담당업무 (권한신청사유)	교육부 XXX 사업에 대한 연구관리 업무 담당으로써, 산단 내 연구자에 대한 제재정보 조회 및 관리 필요		
첨부파일	국가R&D제재정보 조회 권한 신청.hwp		
처리의견	해당 기관 소속의 인물에 대한 제재정보 조회를 필요로 하므로, 조회 범위를 '소속기관'으로 변경 승인합니다.		

권한 재신청

MY제재정보 메인

< 권한 신청 처리상태 확인 (승인 및 처리의견 확인) >

2.3. 제재정보 등록

제재정보 서비스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후, 메인화면 우측하단의 **[제재정보]**를 클릭하면 제재정보 조회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의 **[제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제재정보 등록 및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국가R&D사업관리' (National R&D Management) portal. The top navigation bar contains links for '정책정보', 'R&D공고', 'R&D사업/과제', '조사분석통계', '유사과'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1), '제재정보'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2), and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 The main content area on the left features a sidebar with '도움말', '제재정보'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3), and '제재등록'. The '제재정보' section shows a list of sanctions with columns for '제재대상' (Sanctioned Party), '제재종류' (Sanction Type), '제재기간' (Sanction Period), and '제재내용' (Sanction Details). Below the list, there are summary statistics: '참여제한(31701)', '환수금(808)', and '제재부가금(133)'. The bottom section includes a search bar and various filters for refining the search results.

[제재등록 메인화면]

제재정보 등록 및 처리상태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① 신규등록 :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제재정보를 신규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 ② 등록현황 : 사용자가 등록한 제재정보에 대한 처리상태 및 상태별 정보 건수를 나타냅니다.
 - 접수 : 사용자가 신규 등록한 건수으로써, NTIS 관리자가 등록된 정보에 대해 확인 중에 있어 승인처리 전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 승인 :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가 최종 승인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수정요청 : 사용자가 기존 등록한 데이터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정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해 NTIS 관리자가 변경된 정보에 대해 확인 중에 있어 승인처리 전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 반려 :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승인 거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③ 시작일 설정 지원 : 참여제한 정보를 등록하기 전, 참여제한 대상의 기존 참여제한 여부와 해당 처분의 참여제한 시작일 및 종료일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가 등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목록 및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처리상태의 제재정보를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재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제재정보의 유형에 따라 아래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탭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제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제재정보

1

등록

신규

등록현황

접수 : 0건

승인 : 1847건

수정요청 : 0건

반려 : 149건

시작일 설정 지원

조건 | 검색 조건을 입력 또는 연역여부와 검색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인물 및 기관명

전문기관

검색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등록방법 ☒ 단건등록 ☐ 복수등록

*등록자이름 김영주

*연락처 0313896365 ☎ 02-367-2664

*E-mail borichoi09@kaia.re.kr

*전문기관명

*해당제재 소관부처 선택

문제과제정보

2 *과제수행연도 선택

*과제유형 선택

3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참여제한입력여부

대상	성명	보기	삭제

3 추가 저장

재부가금(33)

시작일	종료일	상세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제재조치
제재등록
MY제재 확인하기
전문기관 담당자

2.3.1. 참여제한-단건등록

참여제한 정보를 1건씩 등록할 때는 [등록방법]에서 '단건등록'을 선택합니다.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담당자의 정보, 문제과제 정보와 그로 인한 제재조치로서의 참여제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으로써, 해당 표시가 있는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입력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별첨 1 참조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 등록방법

☒ 단건등록
 ☐ 복수등록

* 연락처

012345678 예) 02-367-2664

*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 등록자이름

김영주

* E-mail

ntis@ntis.go.kr

*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문제과제정보

* 과제수행연도

선택

* 과제유형

선택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참여제한입력매뉴얼

* 참여제한고유번호

* 참여제한 대상선택

인물

* 성명

* 생년월일

선택

년

선택

월

선택

일

과학기술인번호

* 성별

☐ 남자
 ☐ 여자

* 소속기관명

* 국내외구분

☐ 국내
 ☐ 국외

* 사유

선택

* 참여제한 기간

~

* 근거규정

* 근거공문파일

찾아보기...

비고

8

추가

저장



<각 항목별 입력 유의사항>

- ① 전문기관명 :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관리 및 NTIS 입력을 수행하는 과제 관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을 입력합니다.(기관 약칭 또는 약어 입력 제한)
- ② 해당제재 소관부처 :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제재조치를 최종 승인하고 관리하는 **소관 부처**를 선택합니다.
- ③ 참여제한 고유번호 : 각 전문기관 내(PMS)에서 해당 참여제한 건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참여제한 고유번호는 **추후 NTIS와 데이터 일치성 점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이니, **반드시 각 전문기관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④ 참여제한 대상선택 : 참여제한 대상이 인물인지 기관인지 선택합니다.
- ⑤ 인물 참여제한 등록시, **인물의 생년월일+성별+국내외구분과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생략가능)**를 입력합니다.
- ⑥ 참여제한 기간 : 참여제한 시작일은 종료일보다 선행한 날짜이어야 합니다.
ex. 시작일 : 2015-06-25 / 종료일 : 2015-06-24 => 입력불가
- ⑦ 근거공문파일 : 근거공문파일은 해당 참여제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입력받는 항목입니다. 입력하신 참여제한 정보의 **각 항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며, 따라서 **공문 파일에는 참여제한 정보 등록시 입력한 항목의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참여제한 정보의 상세내용이 공문의 붙임(또는 별첨) 파일로 존재할 경우, 공문 파일과 붙임(또는 별첨)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추가/저장 : 1개의 문제과제에서 제재정보가 여러건 발생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과제정보의 재입력없이** 제재정보만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을 완료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제과제정보 입력시 **[과제수행년도]**와 **[과제유형]**을 선택하면, 과제검색 기능을 통해 입력할 지, 선택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과제 입력방법 판단기준>

- 1) 당해연도 이전(N-1년)의 과제 : 과제검색을 통한 자동입력
- 2) 당해연도(N년) 과제 및 2012년 이전 공동·위탁 과제* : 직접 입력

* NTIS 시스템에서 미보유한 정보로써, 검색 및 자동채우기 불가

구분	당해년도	당해년도 이전년도	
		2012년 이후	2012년 이전
세부과제(주관/협동)	직접입력	검색 입력	검색 입력
공동과제	직접입력	검색 입력	직접입력
위탁과제	직접입력	검색 입력	직접입력

1) 과제검색을 통한 자동입력

- 과제검색기능(팝업)을 통해 NTIS에 제출된 과제를 검색 후, 해당 과제를 선택하면 문제과제 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 등록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단건등록 <input type="radio"/> 복수등록	* 등록자이름 김영주
* 연락처 012345678 예) 02-367-2664	* E-mail ntis@ntis.go.kr
*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 해당제도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문제과제정보

① * 과제수행연도 2014 ▼ * 과제유형 세부(주간/월등) ▼

* 과제번호	* 부처명 선택 ▼
* 세부사업명	
* 과제명	
* 과제수행기간명	
* 연구수행주체 선택 ▼	
* 사업장등록번호 구분 <input type="radio"/> 사업장등록번호	

참여제한

모든 정보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저장되고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R&D사업관리

[정책정보](#)
[R&D공고](#)
[사업전주기](#)
[세부과제](#)
[조사분석통계](#)
[유사과제](#)
[제재정보](#)
[성과평가정보](#)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등록자이름	김영주	E-mail	ntis@ntis.go.kr
연락처	012345678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문제과제정보

과제수행연도	2014	과제유형	세부(주관/협동)
과제번호	1711022176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제명	나노 섬유 기술 기반의 헬스 의류 시스템 개발(총괄사업_3/3)		
과제수행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당해연도연구비(원)	557,293,000
연구수행주체	출연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번호	1198201008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대상	참여제한기간	상세보기
1 한국기업	2017-03-22 ~ 2018-03-21	상세보기

제재구분	제재예정
참여제한고유번호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참여제한 대상	기관
기관명	한국기업
사업자등록번호구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번호	111-11-11111
사유	연구결과불량
참여제한 기간	2017-03-22 ~ 2018-03-21
근거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근거공문파일	NTIS 제재정보 조회 권한 신청 매뉴얼(2017.02).pdf
비고	

[목록으로](#)
[추가등록](#)

제재조회

제재등록

MY제재 확인하기

전문기관 담당자

2.3.2. 참여제한-복수등록

참여제한 정보를 한꺼번에 여러건을 등록할 때는 **[등록방법]**에서 '복수등록'을 선택하여,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고 저장합니다.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 등록방법

☐단건등록
 ☒복수등록

* 등록자이름

김영주

* 연락처

012345678 예) 02-367-2664

* E-mail

ntis@ntis.go.kr

*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제재유형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 제재대상

☒인물
 ☐기관

* 근거공문파일

찾아보기...

복수등록

①

인물 엑셀양식

제재대상정보 엑셀파일업로드

②

찾아보기...

③

저장

<데이터 유효성 검증>

단건 등록시에는 각 입력된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즉시 수행하지만, 복수등록은 파일이 저장된 이후 일괄적으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합니다.

1) 문제과제 정보 오류

문제과제 항목 중 **과제수행년도, 과제유형, 과제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분석시 제출한 과제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과제정보가 없을 경우, 문제과제 정보 오류로 인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R&D사업관리의 세부과제 검색을 수행하여 정확한 과제정보로 수정 후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데이터 오류

사용자가 등록한 제재정보가 이미 **NTIS에 기등록된 제재정보와 일치할 경우**, 동일한 정보가 있음을 알림서비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복데이터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건의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4

2.3.3. 환수금-단건등록

환수금 정보를 1건씩 등록할 때는 [등록방법]에서 '단건등록'을 선택합니다.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담당자의 정보, 문제과제 정보와 그로 인한 제재조치로서의 환수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으로써, 해당 표시가 있는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입력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별첨 1 참조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 등록방법

☒ 단건등록
☐ 복수등록

* 등록자이름

김영주

* 연락처

012345678

예) 02-367-2664

* E-mail

ntis@ntis.go.kr

① *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② *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문제과제정보

* 과제수행연도

선택

* 과제유형

선택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환수금입력매뉴얼

대상

성명

보기

삭제

1

기관

보기

삭제

③ * 환수금고유번호

④ * 환수대상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

* 기관번호

예) 1231212345

⑤ * 환수사유

선택

⑥ * 환수대상금액

(단위 : 원)

* 납부금액

(단위 : 원)

* 납부진행상태

선택

⑦ * 근거공문파일

찾아보기...

비고

⑧

추가

저장



<각 항목별 입력 유의사항>

- ① 전문기관명 :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관리 및 NTIS 입력을 수행하는 과제 관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을 입력합니다.(기관 약칭 또는 약어 입력 제한)
- ② 해당제재 소관부처 :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제재조치를 최종 승인하고 관리하는 **소관 부처**를 선택합니다.
- ③ 환수금 고유번호 : 각 전문기관 내(PMS)에서 해당 환수금 건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환수금 고유번호는 **추후 NTIS와 데이터 일치성 점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이니, **반드시 각 전문기관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④ 환수대상기관명 : 사업비 환수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 기관명을 입력합니다.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을 입력합니다.(기관 약칭 또는 약어 입력 제한)
- ⑤ 환수사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조치가 발생하게 된 귀책사유를 선택합니다.
- ⑥ 환수대상금액 및 납부금액 : 반드시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합니다.
- ⑦ 근거공문파일 : 근거공문파일은 해당 환수금 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입력받는 항목입니다. 입력하신 환수금 관련 정보의 **각 항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며, 따라서 **공문 파일에는 환수금 정보 등록시 입력한 항목의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환수금 관련 정보의 상세내용이 공문의 붙임(또는 별첨) 파일로 존재할 경우, 공문 파일과 붙임(또는 별첨)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추가/저장 : 1개의 문제과제에서 제재정보가 여러건 발생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과제정보의 재입력없이** 제재정보만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을 완료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저장되고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R&D사업관리

[정책정보](#)
[R&D공고](#)
[사업전주기](#)
[세부과제](#)
[조사분석통계](#)
[유사과제](#)
[제재정보](#)
[성과평가정보](#)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등록자이름	김영주		
연락처	012345678	E-mail	ntis@ntis.go.kr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문제과제정보

과제수행연도	2014	과제유형	세부(주관/협동)
과제번호	1711022176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제명	나노 섬유 기술 기반의 헬니스 의류 시스템 개발(중관사업_3/3)		
과제수행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당해연도연구비(원)	557,293,000
연구수행주체	출연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번호	1198201008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대상		환수대상금액	상세보기
1	한국기업	760,000,000원	상세보기

환수금고유번호	G022015042377273		
환수대상기관명	블루문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구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번호	145-78-98733
환수사유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환수대상금액	760,000,000	납부금액	240,000,000
납부진행상태	납부중		
근거공문파일	시연용공문.pdf		
비고			

[목록으로](#)
[추가등록](#)

제재조회

제재등록

MY제재 확인하기

전문기관 담당자

2.3.4. 환수금-복수등록

환수금 정보를 한꺼번에 여러건을 등록할 때는 **[등록방법]**에서 '복수등록'을, 제재유형에서 '환수금'을 선택한 후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고 저장합니다.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 등록방법

☐ 단건등록
 ☒ 복수등록

* 연락처

예) 02-367-2664

* 전문기관명

* 제재유형

☐ 참여제한
 ☒ 환수금
 ☐ 제재부가금

* 근거공문파일

찾아보기...

* 등록자이름

* E-mail

* 해당제재 소관부처

선택

▼

* 제재대상

☒ 기관

복수등록

①

기관 엑셀양식

제재대상정보
엑셀 파일 업로드

②

찾아보기...

③

저장

<데이터 유효성 검증>

단건 등록시에는 각 입력된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즉시 수행하지만, 복수등록은 파일이 저장된 이후 일괄적으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합니다.

1) 문제과제 정보 오류

문제과제 항목 중 **과제수행년도, 과제유형, 과제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분석시 제출한 과제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과제정보가 없을 경우, 문제과제 정보 오류로 인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R&D사업관리의 세부과제 검색을 수행하여 정확한 과제정보로 수정 후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데이터 오류

사용자가 등록한 제재정보가 이미 **NTIS에 기등록된 제재정보와 일치할 경우**, 동일한 정보가 있음을 알림서비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복데이터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건의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8

2.3.5. 제재부가금-단건등록

제재부가금 정보를 1건씩 등록할 때는 **[등록방법]**에서 '단건등록'을 선택합니다.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담당자의 정보, 문제과제 정보와 그로 인한 제재조치로서의 제재부가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으로써, 해당 표시가 있는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입력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별첨 1 참조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 등록방법

☒ 단건등록
☐ 복수등록

* 연락처

012345678

예) 02-367-2664

* E-mail

ntis@ntis.go.kr

* 등록자이름

김영주

① *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② *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표시는 필수입력 입니다.

문제과제정보

* 과제수행연도

선택

* 과제유형

선택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입력매뉴얼

대상	성명	보기	삭제
1 인물		보기	삭제

③ * 제재부가금고유번호

④ * 제재부가금대상선택

인물

⑤ * 성명

* 생년월일

선택

년

선택

월

선택

일

과학기술인번호

* 성별

☐ 남자
☐ 여자

* 소속기관명

* 국내외구분

☐ 국내
☐ 국외

⑦ * 징수대상금액

(단위 : 원)

* 납부금액

(단위 : 원)

* 납부진행상태

선택

⑧ * 근거공문파일

찾아보기...

비고

⑨

추가

저장



<각 항목별 입력 유의사항>

- ① 전문기관명 :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관리 및 NTIS 입력을 수행하는 과제 관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을 입력합니다.(기관 약칭 또는 약어 입력 제한)
- ② 해당제재 소관부처 :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제재조치를 최종 승인하고 관리하는 **소관 부처**를 선택합니다.
- ③ 제재부가금 고유번호 : 각 전문기관 내(PMS)에서 해당 제재부가금 건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제재부가금 고유번호는 **추후 NTIS와 데이터 일치성 점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이니, 반드시 각 전문기관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④ 제재부가금대상선택 : 제재부가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 대상이 인물인지 기관인지 선택합니다.
- ⑤ 인물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입력하는 항목 중에서, 인물의 **인물의 생년월일+성별+국내외구분과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생략가능)**를 입력합니다.
- ⑥ 제재부가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재조치 중 연구비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제재 일때만 발생하므로, 별도의 제재사유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⑦ 징수대상금액 및 납부금액 : 반드시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합니다.
- ⑧ 근거공문파일 : 근거공문파일은 해당 제재부가금 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입력받는 항목입니다. 입력하신 제재부가금 관련 정보의 **각 항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며, 따라서 공문 파일에는 제재부가금 정보 등록시 입력한 항목의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재부가금 관련 정보의 상세내용이 공문의 붙임(또는 별첨) 파일로 존재할 경우, 공문 파일과 붙임(또는 별첨)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⑨ 추가/저장 : 1개의 문제과제에서 제재정보가 여러건 발생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과제정보의 재입력없이** 제재정보만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을 완료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저장되고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R&D사업관리

[정책정보](#)
[R&D공고](#)
[사업전주기](#)
[세부과제](#)
[조사분석통계](#)
[유사과제](#)
[제재정보](#)
[성과평가정보](#)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등록자이름	김영주		
연락처	012345678	E-mail	ntis@ntis.go.kr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문제과제정보

과제수행연도	2014	과제유형	세부(주관/협동)
과제번호	1711022176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제명	나노 섬유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의류 시스템 개발(중과사업_3/3)		
과제수행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당해연도연구비(원)	557,293,000
연구수행주체	출연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번호	1198201008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대상	징수대상금액	상세보기
1 홍길동	89,000,000,000 원	상세보기

제재부가금고유번호	TL062012071822		
제재부가금대상	인물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6 -08 -13
과학기술연번호		성별	남자
소속기관명	한국기업	국내외구분	국내
징수대상금액	89,000,000,000	납부금액	89,000,000,000
납부진행상태	환납		
근거공문파일	한국기업 제재부가금.pdf		
비고			

[목록으로](#)
[추가등록](#)

제재조회

제재등록

MY제재 확인하기

전문기관 담당자

2.3.6. 제재부가금-복수등록

제재부가금 정보를 한꺼번에 여러건을 등록할 때는 **[등록방법]**에서 '복수등록'을, 제재유형에서 '제재부가금'을 선택한 후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고 저장합니다.

제재등록

등록자정보

* 등록방법

☐단건등록
 ☒복수등록

* 등록자이름

김영주

* 연락처

012345678 예) 02-367-2664

* E-mail

ntis@ntis.go.kr

*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 해당제재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제재유형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 제재대상

☒인물
 ☐기관

* 근거공문파일

찾아보기...

복수등록

①

인물 엑셀양식

제재대상정보 엑셀파일업로드

②

찾아보기...

③

저장

<데이터 유효성 검증>

단건 등록시에는 각 입력된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즉시 수행하지만, 복수등록은 파일이 저장된 이후 일괄적으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합니다.

1) 문제과제 정보 오류

문제과제 항목 중 **과제수행년도, 과제유형, 과제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분석시 제출한 과제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과제정보가 없을 경우, 문제과제 정보 오류로 인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R&D사업관리의 세부과제 검색을 수행하여 정확한 과제정보로 수정 후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데이터 오류

사용자가 등록한 제재정보가 이미 **NTIS에 기등록된 제재정보와 일치할 경우**, 동일한 정보가 있음을 알림서비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복데이터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건의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4. 제재정보 수정

미납기술료 납부, 연구자(기관)의 이의신청, 환수금 납부금액 변경, 정보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당초 등록한 정보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메인화면 우측하단의 **[제재정보]**를 클릭하면 제재정보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의 **[제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가 등록한 제재정보에 대한 등록현황을 확인하고 수정요청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 **[승인]**된 건에 대한 상세보기 창을 열고, 하단의 **[수정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로그인 한 사용자가 등록한 제재정보에 한해서 정보 변경 및 수정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가 등록한 제재정보에 대한 수정권한 이관요청을 해야합니다.(관련절차는 KISTEP 지식정보실 문의)

2.5. 제재정보 조회

국가R&D 사업 및 과제관리 등을 위해 제재정보를 조회합니다.

제재조치를 받은 인물 및 기관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제재조치 유형별, 과제별, 부처별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제재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R&D사업관리
정책정보 R&D공고 사업전주기 세부과제 조사분석통계 유사과제 제재정보 성과평가정보

제재정보

도움말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제재정보 : 검색시점에 유효*한 제재정보전체(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정보)
- 제재분류 : 1)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은 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 전 부처 제재정보 전체
2)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은 연구기관(대학, 출연연구소 등) 담당자 - 해당 기관 소관 제재정보
- 정보출처 : 각 부처의 대표전문기관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제재발생 시 이를 NIS에 직접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및 자료제공 관련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02-2110-2735)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다운로드)
- NIS 사업관리서비스 기능 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식정보실(02-589-2953)
- 언론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재정보 열람 삭제 (공한사항 상세보기)
- 2016년도 제재정보 일력 매뉴얼 다운로드

* 현재 로그인한 계정은 전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① 조건 | 검색조건을 입력 또는 선택하시고 검색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검색방법 ☒ 제재대상별 검색 ☐ 문제과제별 검색 ☐ 참여제한기간별 검색

검색단위 ☒ 단건 검색 ☐ 복수 검색

제재상태구분 ☐ 전체 ☐ 제재예정 ☐ 제재중 ☐ 제재해지 ☐ 제재종료

제재대상 ☐ 전체 ☐ 인물 ☐ 기관

인물 및 기관명

제재사유 ☐ 전체 ☐ 연구결과물량 더보기

해당제재 소관부처 ☐ 전체 ☐ 범부처 사업 ☐ 새만금개발청 ☐ 특허청 더보기

국립R&D사업관리 > 정보마당 > 제재정보 MY제재확인하기 상세 - Internet Explorer

제재정보 상세보기

• 등록정보

전문기관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당제재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	-----------	---------

• 문제과제정보

과제수행연도	2014	과제유형	세부(주관/협동)
과제번호	1711014028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명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		
과제명	SW자산개발 사업		
과제수행기관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당해연도연구비(원)	5,375,000,000
연구수행주체	출연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번호	2208203228

• 참여제한정보

제재구분	제재중		
참여제한고유번호	NIPA-연구개발비중도외사용-170002		
참여제한 대상	기관		
기관명	주식회사 올림스퀘어		
사업자등록번호구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번호	134-67-07419
사유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기간	2017-02-21 ~ 2018-02-20
근거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정보통신진흥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정보통신진흥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제재조치)		
비고			
근거공문파일	(미래부 공문) SW원문출발기획사 창업기업 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 심의결과 원안 확정 통보.hwp		

수정요청 열기

부가금(133)

시작일	종료일	상세보기
116-06-29	117-06-20	보기
117-02-21	018-02-20	보기
117-02-21	018-02-20	보기
117-03-10	018-03-09	보기

별첨 1

주요 수집항목에 대한 입력양식 및 항목 설명

□ 참여제한

(1) 인물 참여제한

문제과제정보										참여제한정보													
(1) 과제 유형	(2) 과제 수행 연도	(3) 과제 번호	(4) 부처 명	(5) 사업 명	(6) 과제 명	(7) 과제 수행 기관	(8)사업자 등록번호 (8-1)(8-2) 구분 기관 번호	(9) 당해 연도 연구 비	(10) 연구 수행 주체	(11)인물						(13) 근거 규정	(14) 사유	(15) 시작 일	(16) 종료 일	(17) 해제 일	(18) 비고	(19) 참여 제한 고유 번호	(20) 근거 공문 파일
										(11-1) 성명	(11-2) 생년 월일	(11-3) 성별	(11-4) 소속 기관	(11-5) 국내 외 구분	(11-6) 과학 기술인 번호								

(2) 기관 참여제한

문제과제정보										참여제한정보											
(1) 과제 유형	(2) 과제 수행 연도	(3) 과제 번호	(4) 부처명	(5) 사업명	(6) 과제명	(7) 과제 수행 기관	(8)사업자 등록번호		(9) 당해 연도 연구 비	(10) 연구 수행 주체	(12)기관			(13) 근거 규정	(14) 사유	(15) 시작일	(16) 종료일	(17) 해제일	(18) 비고	(19) 참여 제한 고유 번호	(20) 근거 공문 파일
							(8-1) 구분	(8-2) 기관 번호			(12-1)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12-2) 구분	(12-3) 기관 번호								

① 문제과제정보(공통)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과제 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1)과제유형*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코드값을 입력 (1:세부(주관/협동), 2:위탁, 3:공동)
(2)과제수행연도*	부정행위가 발생한 년도 또는 계속과제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마지막으로 수행된 과제연도를 4자리 숫자로 입력 (예시) 2015
(3)과제번호*	과제수행연도의 해당 문제과제 번호를 입력 ※ 조사분석 시 제출한 기관 내 과제번호 혹은 NTIS 고유번호를 입력
(4)부처명*	문제과제가 속한 사업의 소관 부처를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5)사업명*	문제과제가 속한 세부사업명을 조사분석시 제출한 사업명으로 입력
(6)과제명*	문제과제의 과제명을 조사분석시 제출한 과제명으로 입력
(7)과제수행기관*	문제과제를 수행한 기관명을 입력.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 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과제 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8)사업자 등록번호*	(8-1)구분*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 유형을 코드값으로 입력 (1:사업자등록번호,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
	(8-2)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고유번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드값 1(사업자등록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를 제외한 10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1234567890 오입력 예: 123-45-67890 코드값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9)당해연도연구비*		문제과제의 당해연도 정부연구비를 원 단위로 입력
(10)연구수행주체*		과제수행기관의 기관유형 코드 값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② 참여제한 정보(인물/기관 선택)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참여제한 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11) 인물	(11-1)성명*	참여제한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입력
	(11-2)소속기관명*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11-3)생년월일*	참여제한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공백 없이 8자리로 입력 (예시) 19701104
	(11-4)성별*	성별을 구분하여 입력 (남/여 로 입력)
	(11-5)국내외구분*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입력 (1:국내, 2:국외)
	(11-6)과학기술인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공백 없이 8자리로 입력 (예시) 12345678: NTIS에서 발급받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입력 ※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생략가능

참여제한 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12) 기관	(12-1)기관명*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12-2)구분*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 유형을 코드값으로 입력 (1:사업자등록번호,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
		(12-3)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고유번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코드값 1(사업자등록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를 제외한 10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1234567890 오입력 예: 123-45-67890코드값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13)근거규정*			해당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정명 기재
(14)사유*			참여제한 처분이 발생하게 된 귀책사유를 코드값으로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15)시작일*			참여제한 시작년월일을 8자리 숫자로 입력 (예시) 시작년월일: 20150408
(16)종료일*			참여제한 종료년월일을 8자리 숫자로 입력 (예시) 종료년월일: 20150408
(17)해제일			참여제한이 귀책사유 소멸 등으로 인해 중도 해제되었을 경우, 해제년월일을 8자리 숫자로 입력 (예시) 해제년월일: 20150408
(18)비고			심의결과, 특이사항 등을 2,000자(한글 기준) 이내로 입력
(19)참여제한고유번호*			각 기관 시스템(PMS)에서 참여제한 건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 입력 ※ 시스템 상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해당 건에 대한 고유 식별이 가능한 번호 입력 (예시) KISTEP-연구개발내용누설및유출-0001
(20)근거공문파일*			해당 참여제한 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공문 파일 등록. 상기와 같이 입력한 문제과제 정보, 참여제한 관련 대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 파일은 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기능을 통해 파일 원본을 등록하며,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 환수금

문제과제정보										환수금정보										
(1) 과제 유형	(2) 과제 수행 연도	(3) 과제 번호	(4) 부처명	(5) 사업명	(6) 과제명	(7) 과제 수행 기관	(8)사업자 등록번호		(9) 당해 연도 연구 비	(10) 연구 수행 주체	(11) 사유	(12) 환수대 상 기관명	(13)사업자 등록번호		(14) 환수 대상 금액	(15) 납부 금액	(16) 납부 진행 상태	(17) 비고	(18) 환수금 고유번호	(19) 근거 공문 파일
							(8-1) 구분	(8-2) 기관 번호					(13-1) 구분	(13-2) 기관번호						

① 문제과제정보(공통)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과제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1)과제유형*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코드값을 입력 (1:세부(주관/협동), 2:위탁, 3:공동)
(2)과제수행년도*	부정행위가 발생한 년도 또는 계속과제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마지막으로 수행된 과제년도를 4자리 숫자로 입력 (예시) 2015
(3)과제번호*	과제수행년도의 해당 문제과제 번호를 입력 ※ 조사분석 시 제출한 기관 내 과제번호 혹은 NTIS 고유번호를 입력
(4)부처명*	문제과제가 속한 사업의 소관 부처를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5)사업명*	문제과제가 속한 세부사업명을 조사분석시 제출한 사업명으로 입력
(6)과제명*	문제과제의 과제명을 조사분석시 제출한 과제명으로 입력
(7)과제수행기관*	문제과제를 수행한 기관명을 입력.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8)사업자 등록번호*	(8-1)구분*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 유형을 코드값으로 입력 (1:사업자등록번호,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
	(8-2)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고유번호를 기재 ▪ 코드값 1(사업자등록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를 제외한 10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1234567890 오입력 예: 123-45-67890 ▪ 코드값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9)당해연도연구비*	문제과제의 당해연도 정부연구비를 원 단위로 입력
(10)연구수행주체*	과제수행기관의 기관유형 코드 값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② 환수금 정보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환수금정보		항목 설명
항목 명칭		
(11)사유*		사업비 환수 처분이 발생하게 된 귀책사유를 코드값으로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12)환수대상기관명*		사업비 환수 납부 의무를 가진 대상 기관명 입력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13)사업자 등록번호	(13-1)구분*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 유형을 코드값으로 입력 (1:사업자등록번호,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
	(13-2)기관 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고유번호를 기재 ▪ 코드값 1(사업자등록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를 제외한 10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1234567890 오입력 예: 123-45-67890 ▪ 코드값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14)환수대상금액*		사업비 환수 처분 조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
(15)납부금액*		환수대상금액 중 납부된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
(16)납부 진행상태*		환수금에 대한 납부 진행 상태 코드값을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17)비고		심의결과, 특이사항 등을 2,000자(한글 기준) 이내로 입력
(18)환수금고유번호*		각 기관 시스템(PMS)에서 사업비 환수 건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 입력 ※ 시스템 상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해당 건에 대한 고유 식별이 가능한 번호 입력 (예시) KISTEP-연구개발내용누설및유출-0001
(19)근거공문파일*		해당 사업비 환수 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공문 파일 등록. 상기와 같이 입력한 문제과제 정보, 환수 관련 대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 파일은 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기능을 통해 파일 원본을 등록하며,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제재부가금

(1) 인물에 부과된 제재부가금

문제과제정보										제재부가금정보														
(1) 과제 유형	(2) 과제 수행 연도	(3) 과제 번호	(4) 부처명	(5) 사업명	(6) 과제명	(7) 과제 수행 기관	(8)사업자 등록번호		(9) 당해 연도 연구비	(10) 연구수 행주체	(9)인물						(11) 징수 대상 금액	(12) 납부 금액	(13) 납부 진행 상태	(14) 비고	(15) 제재 부가 금 고유 번호	(16) 근거 공문 파일		
							(8-1) 구분	(8-2) 기관 번호			(9-1) 성명	(9-2) 생년 월일	(9-3) 성별	(9-4) 소속 기관	(9-5) 국내 외 구분	(9-6) 과학 기술인 번호								

(2) 기관에 부과된 제재부가금

문제과제정보										제재부가금정보									
(1) 과제 유형	(2) 과제 수행 연도	(3) 과제 번호	(4) 부처명	(5) 사업명	(6) 과제명	(7) 과제 수행 기관	(8)사업자 등록번호		(9) 당해 연도 연구비	(10) 연구수 행주체	(10)기관			(11) 징수 대상 금액	(12) 납부 금액	(13) 납부 진행 상태	(14) 비고	(15) 제재 부가금 고유번호	(16) 근거 공문 파일
							(8-1) 구분	(8-2) 기관 번호			(10-1)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10-2) 구분	(10-3) 기관 번호							

① 문제과제정보(공통)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과제 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1)과제 유형*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코드값을 입력 (1:세부(주관/협동), 2:위탁, 3:공동)
(2)과제수행년도*	부정행위가 발생한 년도 또는 계속과제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마지막으로 수행된 과제년도를 4자리 숫자로 입력 (예시) 2015
(3)과제번호*	과제수행년도의 해당 문제과제 번호를 입력 ※ 조사분석 시 제출한 기관 내 과제번호 혹은 NTIS 고유번호를 입력
(4)부처명*	문제과제가 속한 사업의 소관 부처를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5)사업명*	문제과제가 속한 세부사업명을 조사분석시 제출한 사업명으로 입력
(6)과제명*	문제과제의 과제명을 조사분석시 제출한 과제명으로 입력
(7)과제수행기관*	문제과제를 수행한 기관명을 입력.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 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과제 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8)사업자 등록번호*	(8-1)구분*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 유형을 코드값으로 입력 (1:사업자등록번호,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
	(8-2)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고유번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드값 1(사업자등록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를 제외한 10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1234567890 오입력 예: 123-45-67890 코드값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9)당해연도연구비*		문제과제의 당해연도 정부연구비를 원 단위로 입력
(10)연구수행주체*		과제수행기관의 기관유형 코드 값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② 제재부가금 정보(인물/기관 선택)

제재부가금 인물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9) 인물	(9-1)성명*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입력
	(9-2)소속기관명*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 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9-3)생년월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공백 없이 8자리로 입력 (예시) 19701104
	(9-4)성별*	성별을 구분하여 입력 (남/여 로 입력)
	(9-5)국내외구분*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입력 (1:국내, 2:국외)
	(9-6)과학기술인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공백 없이 8자리로 입력 (예시) 12345678: NTIS에서 발급받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입력 ※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생략가능

제재부가금 인물정보		
항목 명칭		항목 설명
(10) 기관	(10-1)기관명*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단)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 표기 금지)로 작성
	(10-2)구분*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 유형을 코드값으로 입력 (1:사업자등록번호,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
	(10-3)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고유번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드값 1(사업자등록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를 제외한 10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1234567890 오입력 예: 123-45-67890 코드값 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11)징수대상금액*		제재부가금 징수 처분 조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
(12)납부금액*		징수대상금액 중 납부된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
(13)납부 진행상태*		제재부가금에 대한 납부 진행 상태 코드값을 입력 ※ 입력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세부 입력 코드표]참조
(14)비고		심의결과, 특이사항 등을 2,000자(한글 기준) 이내로 입력
(15)제재부가금고유번호*		각 기관 시스템(PMS)에서 제재부가금 건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 입력 ※ 시스템 상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해당 건에 대한 고유 식별이 가능한 번호 입력 (예시) KISTEP-연구비 용도 외 사용-0001
(16)근거공문파일*		해당 제재부가금 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공문 파일 등록. 상기와 같이 입력한 문제과제 정보, 제재부가금 관련 대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 파일은 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기능을 통해 파일 원본을 등록하며,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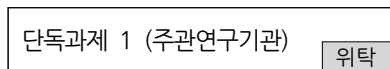
□ 각 세부 입력 코드표

① 과제 유형(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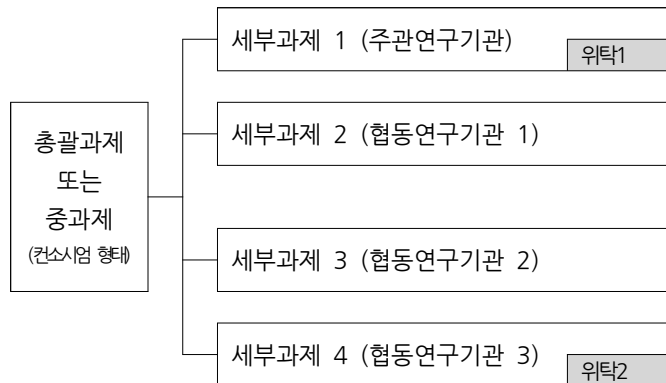
유형	코드	설명
세부 (주관/협동)	01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과제인 경우
위탁	02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과제인 경우
공동	03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의 과제인 경우

<과제구성도 예시>

<예시 1>



<예시 2>



<예시3>



* 일부 부처의 경우 '협동, 공동'과 '위탁'이란 용어 대신, '참여기관', '용역'의 용어를 사용

② 부처(공통)

신부처(2013년 정부부처 개편 이후)	
코드	부처명
P10	고용노동부
P11	공정거래위원회
P12	교육부
P13	국무조정실
P14	국방부
P15	국토교통부
P16	기상청
P17	기획재정부
P18	농림축산식품부
P19	농촌진흥청
P20	문화재청
P21	문화체육관광부
P22	미래창조과학부
P23	방송통신위원회
P24	방위사업청
P25	법무부
P26	법제처
P27	보건복지부
P28	산림청
P29	산업통상자원부
P30	소방방재청
P31	식품의약품안전처
P32	안전행정부
P33	여성가족부
P34	외교부
P35	원자력안전위원회
P36	중소기업청
P37	통일부
P38	해양경찰청
P39	해양수산부
P4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41	환경부
P42	새만금개발청
P43	경찰청
P44	특허청
P45	국민안전처
P46	행정자치부

구부처(2013년 정부부처 개편 이전)	
코드	부처명
N10	국무총리실
N11	외교통상부
N12	기획재정부
N13	법무부
N14	국방부
N15	교육과학기술부
N16	농림수산식품부
N17	국토해양부
N18	보건복지부
N19	고용노동부
N22	통일부
N23	법제처
N25	산림청
N29	농촌진흥청
N30	중소기업청
N34	환경부
N36	기상청
N37	경찰청
N38	지식경제부
N39	문화체육관광부
N40	공정거래위원회
N42	해양경찰청
N45	행정안전부
N47	식품의약품안전청
N52	문화재청
N55	여성가족부
N59	소방방재청
N60	국가청소년위원회
N63	방위사업청
N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69	방송통신위원회
N7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71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연구수행주체(공통)

유형	코드	설명
국공립연구소	01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
출연연구소	02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대학	03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대기업	0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05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중소기업인 기업
정부부처	06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중견기업	08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중견기업인 기업
기타	99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의 수행주체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산업발전법」에 의거함

④ 제재조치 사유 코드(참여제한, 환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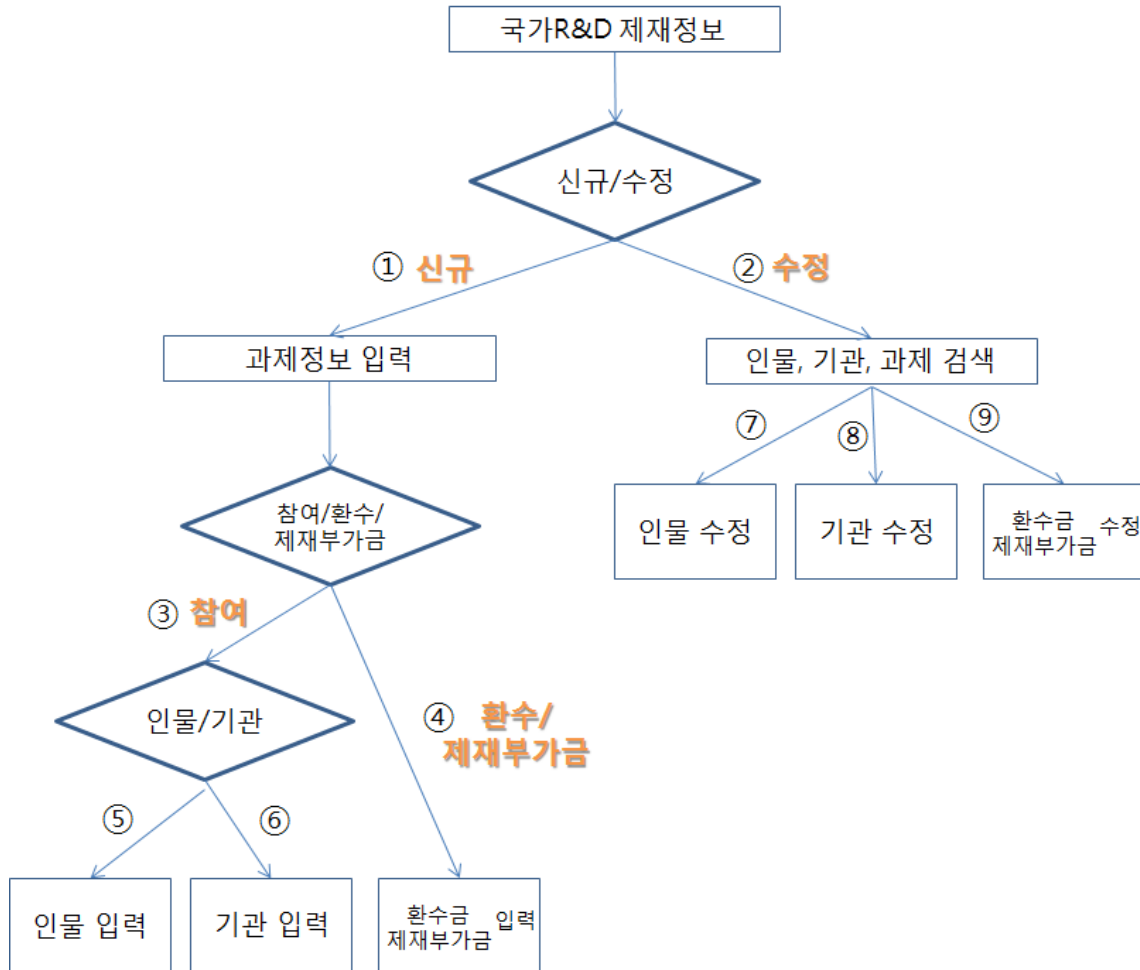
사유	코드	설명
연구결과 불량	0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0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0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 미납	0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0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0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	0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0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⑤ 납부진행상태 코드(환수금, 제재부가금)

상태	코드	설명
완납	01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
납부 중	02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수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계획서 상 마지막 회차의 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함
미납	03	납부기한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04	환수금 미납액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조치 한 경우
종료	05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어 면제로 결정된 경우
기타	06	소송중으로 환수금집행이 중지되거나 기타 이유로 납부진행 중지된 경우

별첨 2 제재정보 등록 절차

□ 제재정보의 NTIS 등록 절차



	참여제한		환수금·제재부가금
	인물	기관	
신규 제재 발생	① → ③ → ⑤	① → ③ → ⑥	① → ③ → ④
기등록 제재 수정	② → ⑦	② → ⑧	② → ⑨
환수금 미납으로 인한 추가 참여제한 발생	① → ③ → ⑤	① → ③ → ⑥	- (당초 등록한 환수금 정보 유지)